

## 대한민국 2012년 인권보고서

###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통치체제로 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당해 연도에 치러진 두 차례의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했다. 4월 11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다수석을 차지했으며, 12월 19일에 실시된 대선에서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보안 기관은 민간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중요한 인권 문제들로서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들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와 군대 내 가혹 행위들이 보고되었다.

그 외의 인권 문제들로서 일부 공직자 부패,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 성매매, 인신 매매, 탈북자, 소수 민족/인종,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 에이즈 환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이 있었다. 또한 근로자 권리의 제한이 있었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기소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면책이 허용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 a.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살인

정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살인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당해 연도 중에 군대 내에서 7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일반적으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군대 부적응이 자살의 원인이었다. 이전처럼 국방부는 이들 자살 사건에 대한 외부 조사를 실시했으나 관련자가 구속된 사례는 없었다. 국방부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b. 실종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실종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법률은 이러한 관행을 금하고 있으며 정부 당직자가 당해 연도 중에 그러한 관행을 적용했다는 믿을만한 보고는 없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환경

교도소 및 구치소 환경은 전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했으며, 정부는 외부 인권감시단체의 방문을 허용했다.

시설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7월 31일 현재 수용자 수는 총 45,201명이며 이 중 2,440명이 여성이고 573명이 미성년자라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인 국제교도소연구센터(ICPS)에 의하면, 한국 내 교정 시설의 수용능력은 7월 현재 45,960명이다. 교정 당국은 남녀 수용자들을 남녀 성별의 차이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별도의 유사한 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수용자들을 내국인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유사한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간수들이 폭력이나 욕설을 사용했다는 수용자들의 주장은 모두(구체적인 건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국내 최대의 외국인 교정 시설인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불만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 간수의 가혹 행위, 혹은 물리적 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여자교도소에는 여성 보건과 연례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특별 검사실이 운영되고 있다. 수용자들에게는 식수가 제공된다. 1월부터 11월까지 기결수용자 혹은 미결수용자 23명이 사망했다. 20명의 사인은 자연사였으며 3명은 자살이었다. 수용자 사망과 관련하여 교정 당국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었다.

행정: 관계 당국은 교정 기록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고 보존 기한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체계적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비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대체 판결을 의무화하는 법적 절차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벌금·사회봉사·집행유예 판결이 일상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면회가 허용되며 종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교도소 옴부즈맨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는 검열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혹은 인권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거나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신빙성을 갖춘 인권 침해 주장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문서화했다. 관계 당국은 당해 연도 중에 법무부에 접수된 187건의 진정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교도관이 수용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당해 연도 중에 46명의 수용자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을 신청했다.

개선 사항: 11월 12일에 관계 당국은 실내 온도를 화씨 68도로 유지하는 바닥 난방 설비를 천안교도소에 설치했다.

#### **d.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

임의적 체포와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의도된 행위를 한 자를 구금·체포·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은 금지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보법의 철폐 혹은 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이 법조항의 임의적 적용을 배제하는 엄격한 해석을 통해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경찰 및 보안 기관의 역할**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내치안을 담당한다. 민간 정부는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권남용과 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보안 기관이 관련된 면책 조치는 보고되지 않았다.

#### **체포 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

현행범인 경우, 또는 영장 발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은 법에 의해 영장이 요구된다. 이 경우 담당 검사 또는 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직후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국은 자진 출두한 자를 경찰서에서 6시간 이상 심문할 수 없다. 당국은 구속 후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금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보석 제도가 있다.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당국은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혹은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심문 등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에는 제한이 없지만 변호인이 심문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 심문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의 심문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의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 기간 중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공판 전 기간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구금자는 정부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금 기간 중 가족 면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변호인 접견권이 거부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자의적 체포: 당해 연도 중에 관계 당국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59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기소자 중 15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으며, 3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심리가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부인

법률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실제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했다. 하지만 아시아인권기구는 3월 14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사법부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에 연루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하급 판사들을 상대로 징계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급 판사들의 독립성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고 고위 판사에게 경미한 징계를 내렸으며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에서 11월 28일에 발표한 2012~13년도 법치주의 지수에 의하면, 한국의 행정부는 투명하고 부패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사법부 내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재판 절차

법률은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필요한 경우 통역을 이용하고 구속 이유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항소권, 소급 금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당국에서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가 방청인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 2008년에 제정되고 당해 연도에 상설화된 규정에 의거하여 배심원도 판사와의 동의와 협의를 거쳐 평결을 내릴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은 반드시 피고의 사전 신청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의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판사는 검찰과 피고 양측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법정에서 출석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피고인은 상대방 증인을 대면하거나 신문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증거에 접근할 수 있다.

## 정치범 및 피구금자

법무부는 현재 단지 정치적인 신념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혹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시민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법에 따라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는 법률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 위반자는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조항이 없다. 여호와의 증인 산하 기구인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733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평균 1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1950년 이래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총 208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고했다. 10월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수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기결수들의 전과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 민사 사법절차 및 구제방법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사절차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 법원 명령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민은 법원에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잘못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및 통신에 관한 자의적 침해

위와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도청방지법은 정부가 범죄수사의 경우 최장 2개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의 경우 최장 4개월간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법원은 당해 연도 중에 총 96건의 감청을 허가했으며 그 중 65건은 국가정보원과 관련이 있었다. 아시아인권기구는 3월 30일 보고서를 통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전·현직 공직자, 국회의원, 노조 관계자, 학자, 경찰, 언론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보법은 가정 내 북한 라디오 청취 또는 북한 서적을 읽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본 금지규정의 집행 사례는 여전히 드물고, 가정에서 북한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법률에 의해 공무원은 “노동 운동 목적의 집단 행동”이 금지된다. 기존에 사실상 노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은 예외가 인정된다.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와 공무원 134명에게 30만원에서 50만원(\$282~\$470)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제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 a.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독립적 언론, 효과적인 사법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민주적 정치 체제가 어우러져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확보되었다.

검열 혹은 언론보도내용 제약: 독립적인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약 없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국보법에 입각하여 정부는 반정부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찬양 혹은 선동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심의할 수 있으며 유해하다고 판정한 경우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국내 정치 지도자를 비방했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계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그콘서트에서 코미디언 정태호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반말로 발언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코미디언이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반말을 사용한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정했다. 또한, 12월에 서울시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출산하는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월 말에는 정부에서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직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뉴스 통제 강화에 항의하여 파업에 돌입했다.

상당수 부처는 언론사 기자들이 해당 부처 당직자가 행하는 정례 브리핑을 포함하여 기자실 출입권을 보장받기를 원할 경우 기자단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자단이 타 언론사들을 차별하는 규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기자실 출입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자기 검열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명예훼손죄/국가보안법: 법률은 명예훼손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뉴스 보도를 경직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검찰은 9월 17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10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경찰이 거액의 차명계좌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 인터넷의 자유

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했으며 정부가 사법적 감독을 받지 않고 이메일과 인터넷 대화방을 모니터링을 했다. 인터넷 접근은 가능하며 널리 이용된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반국가단체’임을 알면서도 지원 혹은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례로, 관계 당국은 북한 관련 글 100여 건을 리트윗한 혐의로 1월 11일에 운동가 박정근을 구속하고 1월 31일에 기소했다. 11월 21일에 수원지방법원은 박정근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약속과 북한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풍자할 의도였다는 진술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앰네스티인터내셔널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과 정부를 비방”하여 국가 안보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67,300여 건의 인터넷 게시물이 삭제됐다.

방통위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혹은 게시판 같은 SNS 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불법·유해 정보로 규정된 콘텐츠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금지된 게시물이 발견된 경우 정부는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금지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계정이 차단된다.

정부는 또한 폭력 사이트, 외설 사이트, 도박 사이트, 기타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기·식품·의약품 불법 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자살 모의·조장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와 북한 유튜브 채널 및 트위터 계정으로의 직접 접근을 계속 차단하고 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지만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러한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국보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된다.

8월 23일에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판정을 내렸다. 기존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적사항을 등록해야만 했다.

## **학문의 자유 및 문화 행사**

정부는 학문의 자유나 문화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는 법으로 금지되며 정치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시위를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 법에 입각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거 폭력 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일부 시위는 금지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위를 허가했다.

경찰은 1월 10일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민 29명을 체포했으나 이를 뒤에 석방했다. 당국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공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시아인권기구는 2월 9일 보고서를 통해 이 집회가 ‘평화적’이었다고 보고했다. 2007년 이래로 당국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100명 이상 체포했다.

####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물리력이나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단체들의 활동은 자유로웠다.

### **c. 종교의 자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www.state.gov/j/drl/irf/rpt](http://www.state.gov/j/drl/irf/rpt))를 참조한다.

####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무국적자

국내 이동의 자유, 외국여행, 이민, 송환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들과 협력하여 국내 실향민, 난민, 복귀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국외 여행: 많은 경우 방북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북 희망자는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한국 정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2년 이상의 징역이 확정된 자에게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 난민 보호

망명에 대한 접근: 망명 허용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월에 국회를 통과한 난민법은 외국인이 출입국장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강제 송환을 금하고 있다.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는 대부분 일상적으로 망명을 허용하거나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는 대부분 일상적으로 망명을 허용하거나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해 연도 중에 1,143명이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2011년도의 경우 총 1,011명이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며 법무부 혹은 서울행정법원은 42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탈북자는 난민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난민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정부는 60건의 신청을 승인했으며 31명에게 인도적 지위를 인정했다. 2011년도에는 승인 건수가 42건이었다. 6월에 발간된 UNHCR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난민 신청 승인율은 “만족스러운 수준에 크게 미달”했다.

강제송환: 2008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2011년 9월에 체포된 자칭 파룬공 수련자 진징체는

11월 말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송환의 위협 속에서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취업: 정부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했고 취업을 허가했다.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정부는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난민들에게 기초생활비와 의료비를 지급했다.

정부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전통적으로 시행해왔다. 정부는 당해 연도 상반기 동안 탈북자 970명의 재정착을 지원했으며, 2002년 이래로 모두 합쳐 24,000명이 약간 넘는 탈북자가 한국에 재정착했다. 상당수 탈북자는 사회적 차별과 문화적 차이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임대아파트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보조, 의료 지원, 창업 자금, 취업 알선 등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전국에 다수의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면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지역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적응을 뒷받침하고 있다.

임시 보호: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량 난민이 발생한 경우 임시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난민’ 정의를 만족시키는 자에게는 대체 보호 수단으로서 갱신이 가능한 단기 체류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1월부터 10월까지 정부는 난민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한 18명에게 인도주의적 임시 보호 조치를 취했다.

## 무국적자

법무부는 연말 현재 18세 미만의 청소년 3명을 포함한 177명의 무국적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무국적자 혹은 국적이 불분명한 자를 부모를 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률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 제3절.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권리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보통선거권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이 권리를 행사했다.

##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4월 11일과 12월 19일에 각각 치러진 총선과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했다.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2011년 12월에 경찰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대변인을 지냈던 국회의원의 수행비서를 비롯하여 6명을 체포했으며 해당 의원은 직책을 사퇴했다. 당국은 관련자 7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12월 11일에 그 중 6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 총선에서 각 정당 비례대표(총 의석수 54석) 후보의 절반은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245개 지역구에 대한 각 정당 후보의 30퍼센트는 여성을 공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말에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이었고 총 300개 의석 중 47석이 여성 의원이었다. 16개 상임위원회 중 2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여성이었다. 대법관 14인 중 1인, 장관 16인 중 2인이 여성이었다.

유일한 소수 민족 출신 국회의원인 이자스민은 필리핀에서 출생했으며 귀화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국회에 진출했다. 4월 총선에서 이자스민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수천 명이 소셜미디어상에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 **제4절.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부족**

공직자 부정을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정부는 형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공직자 뇌물 수수 및 선거법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다. 실례로, 3월 15일에 국회의원 1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5월 10일에는 또 다른 국회의원이 횡령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또한, 당해 연도 중에 당국은 불법 정치 후원금 수수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로 각각 3명의 현직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말을 기준으로 6건의 재판은 여전히 계류 중이었다.

공무원윤리법에서는 선출직을 포함한 특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형성과정까지 포함해 소득과 자산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감사원과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재산 변동을 추적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몇몇 정부 부처가 공직자 부패를 단속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패 행위에 관한 고충 신고 접수와 처리를 관장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충분한 자원을 바탕으로 실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며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당해 연도 중에 34,347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연말을 기준으로

33,242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에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정보 열람을 허용했다. 8월에 정부는 열린정부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국가 실행계획을 제출했다.

#### **제5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국내외 각종 인권단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제약 없이 활동했으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단체의 의견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2월 10일에 아시아인권기구는 “2월 9일에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일부 인권 단체 사무실과 관계자들의 자택을 포함하여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정부 인권기구: 인권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독립 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행권이 없으며 결정 사항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며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8월 3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명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시민단체와 여야 양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절한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부터 독립되지 못했으며 지나치게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부즈맨 업무는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와대, 국회, 각부 부처 등 각급 정부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다. 권익위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진정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제4절 참조).

일제 강점기에서 1980년대 말 군사 독재 시기에 이르기까지 인권 유린 사건들을 조사하여 발표한 진실화해위원회는 2011년에 해체됐다.

#### **제6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법률은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언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는 기존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법률은 강간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강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지만, 법원은 배우자를 강간한 남편에게 유죄를 판결함으로써 선례를 남겼다.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흥기를 사용하거나 집단 범행인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형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흥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형량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흥기를 사용하거나 집단 범행인 경우에는 형량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해 연도 상반기에 강간은 4,590건이 신고됐으며 강간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 신고 건수는 10,471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의 경우 성범죄 신고 건수는 21,912건이었으며, 20,189명의 범죄자가 체포됐다. 관계 당국은 이 중 2,614명을 구속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쉼터 31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까지 20,746명을 지원하고 148,954회의 상담, 의료 지원, 조사, 법률 지원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률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이 가해자를 상대로 최장 6개월 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명령은 최장 2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약 \$6,6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보호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18,8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교정 치료 및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률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즉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위험이 있고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은 직권에 의해,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명령에 의해 가해자에게 주거 퇴거 혹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통신 장비를 통해 피해자를 접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11년의 경우 6,848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에는 7,359건이었다. 법무부는 당해 연도에 2,773건이 접수되었으며 2011년에는 2,511건이었다고 보고했다. 관계 당국은 그 중 454명을 기소했다. 사건 처리 결과나 유죄 판결 여부 혹은 형량에

관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성희롱: 관련 법률은 회사와 기관들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고, 정부는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사업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1천만 원(약 \$9,4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사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희롱 주장이 제기된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성희롱 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됐다. 공공기관인 경우 행정 처분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에 219건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출산권: 법률은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 그리고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차별과 강압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을 제공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숙련된 분만 보조 인력, 출산 전 산모 보호, 필수적인 출산·산후 보호 등 피임과 모성 보건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다.

차별: 여성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가족법은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혼 후에도 여성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률은 고용과 승진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업을 5백만 원(약 \$4,7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11건의 성차별 진정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15~64세 여성의 취업률이 2012년 9월 현재 55.3퍼센트로 2010년 9월과 비교하여 0.8퍼센트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전체 취업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월을 기준으로 42퍼센트에 조금 못 미쳤다. 신규 채용 여성 공무원과 여성 외교관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 지원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0곳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동종 사업군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채용 계획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달청은 물품 입찰 적격 심사 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 중 상당수가 저임금, 저숙련 계약직에 집중되는 경향 때문에 남녀간 임금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여성 근로자 중 상당수가 저임금, 저숙련 계약직에 집중되는 경향 때문에 남녀간 임금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도 한국의 남녀 급여 격차는 39퍼센트로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5월 25일자 일간지 분석 기사에 의하면 금융계의 경우 여성의 급여는 남성의 57퍼센트 수준이었으며 88개 대기업의 경우 여성의 급여는 남성의 61퍼센트 수준이었다. 같은 기사에서 여성의 평균 근속 기간은 7.7년이었던 반면에 남성의 평균 근속 기간은 12년이었던.

또한, 금융감독원과 통계청에서 8월에 공식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5퍼센트(801명 중 1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국내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10퍼센트에 불과했으며 당해 연도에 매출액 순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경영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 CEO는 8명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사주의 친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 아동

출생 등록: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 관계 당국은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태아가 무국적자인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아동 학대: 2011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가족부에 총 6,05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그 중 111건은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당해 연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22개 직군(12개 직군에서 확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혼인: 법률상의 혼인적령은 남녀 모두 18세이다.

아동 성착취: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13세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위계·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다.

13세 미만 아동 강간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13~19세 미성년자 강간죄는 최저 형량이 징역 5년으로 경감됐다. 그에 추가하여,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발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중에 1건의 화학적 거세 명령 판결이 있었다.

당해 연도 중에 일부 법률이 발효되어 시행에 돌입했다. 2월 1일에 13세 미만 여아와 장애 여성 대상 강간범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는 불법이다. 3월에는 아동·청소년 강간죄 적용 대상을 남아로까지 확대했다. 12월 18일에 국회는 성폭력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했다. 신설된 법률은 2013년 6월에 발효되며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13세 미만 아동 혹은 장애인인 경우 증거보전의 특례를 인정했다.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금지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처한다. 또한 아동 음란물 소지자는 2,000만원(약 \$18,8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해 연도 중에 관계 당국은 아동 음란물 소지자 104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으며 그 중 2명이 기소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아동유괴: 12월 13일에 한국은 '1980년 국제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당사국이 되었다. 국가별 정보에 관한 사항은 국무부 보고서([http://travel.state.gov/abduction/country/country\\_3781.html](http://travel.state.gov/abduction/country/country_3781.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반유대주의

소수의 유태계 인구는 거의 대부분이 해외 파견 근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된 바 없다.

## 인신매매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www.state.gov/j/tip](http://www.state.gov/j/tip))를 참조한다.

## 장애인

법률은 고용, 교육, 비행기 여행 및 기타 교통수단, 건강권, 기타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신체, 감각, 발달, 정신 장애를 가진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건물, 정보, 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법률은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약 \$28,200)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포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의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의료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기회와 접근권을 확대할 목적으로 국립재활원뿐만 아니라 6개 지역에 재활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장애인 고용률은 35.5퍼센트였다.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정부 부처 3퍼센트, 공공기관 2.3~3퍼센트, 민간 기업 2.3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이 면제된다. 상시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1인당 53만원(약 \$500)의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률이 고용 의무 비율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해 연도 중에 관계 당국은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미이행한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매달 약 94만원 혹은 \$880)에 기초한 부담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대상 사업주를 상시 300인 이상에서 상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이 신설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시행령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이 부진한 사업주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당해 연도에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저소득 가구 경증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며 지자체는 수급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연금을 직접 지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에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을 1,324건 접수했다. 인권위는 그 중 1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114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20건을 당사자 합의에 의해 해결했다. 나머지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13~17세 장애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중증 장애 아동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8월 5일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발효됐다. 장애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계를 포함하여 당해 연도 중에 동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 **소수 국민/인종/민족**

사실상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인구 5천 만의 한국에는 당해 연도 말 기준 14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당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177,854명의 외국인이 불법 체류하고 있다.

소수 민족/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상적으로 행해지지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까지 6건의 민족·인종 차별 진정을 접수했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하여 소수 민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맞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사회적 학대, 차별 및 폭력 행위

법무부는 헌법의 평등 원칙이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에게 적용된다고 보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LGBT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거나 차별 혹은 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에 그러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진정이 12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그 중 1건의 경우 지자체 한곳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호소하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했으며,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가 광고의 게재를 수락했어야 했다고 판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7건을 각하하고 2건을 기각했으며 2건은 합의종결했다.

당해 연도 중에 LGBT에 대한 폭행 사건은 보고된 바 없으나 폭행 피해자가 사회적 오명을 두려워한 나머지 차별이나 가혹행위를 신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당해 연도에 한겨레신문에서 십대 성소수자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성적 지향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심각한’ 혹은 ‘매우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인권 운동가와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당해 연도 중에 ‘하나님을 믿는 동성애자 모임’에서 신청한 진정을 각하한 것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6월 3일에 개설된 동성애자 기독교인 카페를 이들 만에 폐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했다.

군 형법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2011년 3월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성애자는 군 입대가 금지된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LGBT 단체들은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연예인 중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퇴출된’ 연예인 한 명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방송에서 하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하는 케이블TV 채널(조이)은 9월 6일에 트랜스젠더들이 출연하는 국내 최초의 프로인 ‘XY그녀’를 방송했으나 보수 단체의 반발에 굴복하여 1회 만에 편성을 보류했다. LGBT 단체인 ‘게이유권자파티’는 경찰에 방송 출연진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출연진이 경찰에 신상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 보호는 성사되지 못했다.

### 기타 사회적 폭력 및 차별

일각에서는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 인식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법률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에게 관한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당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 건은 각하됐으며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외국인 영어 강사들은 취업 비자 발급에 앞서 의무적으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조선족은 이 요건이 면제된다. 7월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한국에 체류하는 어느 뉴질랜드 여성이 이 검사에 반발하여 제출한 차별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당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사건은 계류 중이었다.

## 제7절. 근로자의 권리

###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관련 규정과 규칙을 포함하는 법률은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합법적인 쟁의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는 실제로 보장되고 있었으며 정부의 시행은 효과적이었다. 또한, 법률은 근로자의 권리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되지만 사측과의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 노조는 교섭 창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조원 수가 가장 많은 노조가 전체 노조원을 대표하여 교섭에 임한다. 기간제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또한, 법률은 ‘필수공익사업’ 근로자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보다 광범위하게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 항공, 통신, 수도, 병원, 전력 등 “공중의 일상 생활, 보건, 신체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노조에서 지정한 필수유지업무인원은 쟁의에 참여할 수 없다.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은 일부 특수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통상적으로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의 경우 10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노조원 과반수의 찬성 없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쟁의행위 역시 금지된다. 또한, 폭력, 불법점거, 또는 시설 파괴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임금, 후생,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쟁의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법률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약 \$47,0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그러한 명령을 행했다

모든 노조 연맹은 대체로 정부의 간섭 없이 운영된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공공연구노동조합 등 사무직 노조를 포함하는 노조 연맹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공개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 교육직 근로자의 정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률로 인해 교직원 노조가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았다.

## **b. 강제노동 또는 의무 노동의 금지**

법률은 모든 형태의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을 금하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강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법률은 거의 대부분의 인신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근로기준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다른 중범죄에 준하는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약취·유인죄 및 청소년 보호 관련 형법 조항을 적용하여 인신매매범을 기소·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당국은 1월부터 11월 말까지 강제노동 혐의로 29명을 기소했으며 그 중 19명을 노동력

착취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정부는 전국에 88곳의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국내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입국한 약 50만 명의 저숙련 외국인근로자들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부채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외국인근로자들이 기만적인 채용 관행과 임금 체불 등 강제 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 조건에 직면하는 경우가 흔하다.

2011년에 정부는 뉴질랜드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한국 국적 어선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다양한 강제 노동행위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에 의하면 선원들은 소를 취하하기를 희망했으며,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사건을 조사한 후 관련 기관과 사주를 상대로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구제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련 정부 부처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구제 조치를 수립하고 위반 주장이 제기된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http://www.state.gov/j/tip))를 참조한다.

### c. 아동 노동 금지 및 최저 근로 연령

법으로 노동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학교까지(약 15세)는 의무교육이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취직인허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하려면 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가 미성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간외 근로는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인가 없이는 미성년자의 야간 근로가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했고, 아동 노동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 d. 최저 근로 조건

당해 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580원(약 \$4.30)이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95,550원(\$1,41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제6절 ‘여성’ 참조).

법률은 사업주에게 4시간 근무제의 경우 30분, 8시간 근무제의 경우 1시간을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주휴(週休)'로도 불리는 유급 휴가 규정 등의 일부 근로 기준이 면제된다.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5배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은 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최대 48시간을 근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허용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동안 최대 56시간을 근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1일 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직업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당국은 당해 연도 중에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자를 즉시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위반자 처벌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약 \$94,100)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11월을 기준으로 전국 47개 지사에 320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사고 예방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 등록대상이다. 고용허가제를 포함하여 일련의 규정들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특정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고 이직이 제한되지만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린다. 계약직·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가 노동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제조업·건설업·농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관련 법률과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 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적응 교육을 제공하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주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4개 언어로 통역과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료 법률 자문, 상담, 통역, 자국어 건강검진,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개설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운영했다.

전문직이나 강사 혹은 예술인으로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법률에 의해 전직이 용이하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다수의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직장을 잃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규정에 의해 전직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더이상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면서 자유로운 전직이 어려워졌다. 사업주들은 사실상 구직 근로자의 명단을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선택한 근로자를 접촉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 4년 10개월 체류한 후에는 귀국해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관계 당국은 당사자의 취업 허가를 취소하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 또는 건설 근로자 같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주거비나 식대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고용계약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법률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 모두 2년 정규직 전환 규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2년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현지 언론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들의 지위 때문에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와 한국인 노동자 보다 낮은 임금의 형태로 사용자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분기별로 사망자수와 질병자수에 관한 산업재해 현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11월을 기준으로 85,234건(2011년 동기 대비 264건 증가)의 산재 사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1,977명(전년도 동기 대비 43명 증가)이 사망했다.